

Contents

중소기업을 위한 IBK CEO 리포트 2011 September / Vol.79

경영담론 02

- I. '11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투자전략
- II.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 III. 녹색 동반성장의 새로운 길
- IV. 상가 공동명의 취득! 약인가? 독인가?

쉬어가는 페이지 17

'아토피 피부염'

ISSUE 분석 21

- I. 소버린 쇼크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조사결과
- II.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이슈 및 시사점

경제동향 29

- I. 해외경제
- II. 국내경제
- III. 중소기업
- IV. 금융시장

경제지표 34

2011년 9월호(통권 제79호)

발행인 기업은행장 | 편집인 IBK경제연구소장 |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Tel.02)729-7374 Fax.02)729-6605

편집 및 제작 신생보훈복지인쇄조합 Tel.02)426-4415

본 리포트 수령을 원치 않는 고객께서는
IBK경제연구소 전화(02-729-7374),
이메일(ibkceoreport@ibk.c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11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투자전략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시장, 지금 시점에서 상반기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하반기 전망을 통해 투자전략을 짜보고자 한다.

상반기 서울 매매가격 0.09% 하락, 전세가격 4.0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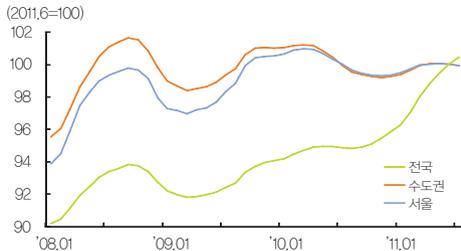
■ 과거,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순서를 유추해보면 재건축 중심의 강남에서 재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강북으로, 그리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상기하게 된다. 최근 양상도 그러할까? 그렇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1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은 지방광역시의 견인으로 전국적인 상승세(3.8%)를 유지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동력은 우선 지역 내 몇 년 간 정지되었던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입주물량 부족이 맞물려 있다. 게다가 교통 호재, 과학벨트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산, 광주, 대전, 창원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의 급등세를 보인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은 '서울 강남 → 서울 강북 → 수도권 → 지방'이라는 가격상승의 지역패턴을 무시하고 있다. 확연히 부동산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한편 '10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은 매월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 최고점 대비 116%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관한 기대심리 위축, 보금자리주택 공급대기 등으로 주택매입을 미루고 있는데다 입주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서울 인근의 수도권 지역이 서울보다 더 높은 전세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소형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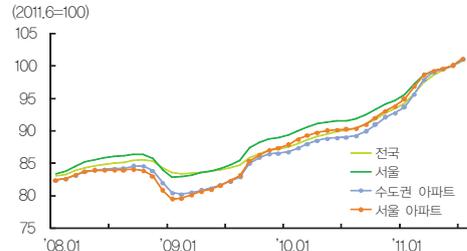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서울지역은 물량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와 전세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등 소형아파트 수요가 몰려 꾸준히 매매 및 전세가격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기업수요가 많은 수원, 화성, 용인, 평택과 지하철 개통예정인 용인 일대와 남양주 등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가격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자료 : 국민은행

주택전세가격지수 추이



자료 : 국민은행

하반기에도 매매가 보합,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며 대외의존성 강해져

■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남지역의 급매 재건축 아파트가 부분적으로 소진됐거나 신도시 지역에 수요자가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에 나서 세입자들의 매매 전환이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주택 매매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11년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은 어떠할까? 대체로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은 상반기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증시폭락 장세와 대내외 경기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불안감으로 인한 주택 매수세 위축이 예상됐지만, 여름휴가 등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변동성은 크지 않았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약보합세 장이 한동안 이어지고 있어 금융위기 직후 급락세가 이어진 '08년과는 달리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대내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대출, 금리 규제가 강화돼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부정책 신뢰도 하락, 각종 부동산규제 폐지여부의 불확실성과 추가 금리인상 및 5차 보금자리 발표, 지역 개발사업 지연 등의 우려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 국제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기세이지만 만약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된다면 주택시장에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

얼마 전,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CD금리가 0.25% 상승하면 전국 주택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10개월 누적 변화는 각각 -0.07%, -0.08%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745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중 약 90%가 변동금리라고 가정하면, 1%p 금리상승은 연간 약 6.7조원의 이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계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만약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된다면 경기위축 및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매매시장과 달리 주택 전세시장은 입주물량 감소와 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 수요 발생, 거래관망으로 인한 전세 선호현상 등에 따라 가격상승의 여지가 높다. 특히 올 9월 말 개통을 앞둔 신분당선(강남~정자), 하반기 개통예정인 용인 경전철 등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분당과 용인 일대에는 가격상승 및 전세수급 불균형이 지역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11년 하반기 부동산가격 주요 변동요인

구분		주요 변수의 변화 동향	'11년 하반기		
			토지 시장	주택시장 매매	전세
거시경제 여건		- 물가 상승 압력 지속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	↘	→
구조적 변화	매매시장 변화	- 중장기적 변동성의 축소, 급격한 가격 상승 기대 감소	↘	↘	→
	매매와 전세관계	-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 하락 또는 정체	↘	↘	↗
	임대차시장 변화	- 보증부 월세의 증가	→	→	↗
	지역시장 관계변화	- 지역적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 흐름 변화	→	→	→
단기적 변수	수요	- 소득 상승세 미미, 실수요 계층인 저·중소득층 증가 미미	→	→	→
		- 고소득층 역시 과다차입 및 만기일시 상환의 높은 비중	→	↘	→
		- 매매 대비 높은 전세 비율, 부족한 수도권 매매수요의 자극	→	→	→
	공급	- 전국적 입주물량 급감, 전년대비 -36.9%	→	↗	↗
		- 보금자리 시범지구 분청약	→	↘	↗
		-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증가세 지속	→	→	↘
금융	- PF 은행권 부실채권 증가, 저축은행 연체율 급증	↘	↘	↗	
정책	- 금융건전성 강화 기조 유지	→	↘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011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으로 부동산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오랜 시간동안 어떤 현상이 되풀이되면 이는 일종의 패턴을 갖게 된다. 부동산현상 역시 마찬가지다. 한동안 불변의 진리처럼 여기던 것 중 하나가 주택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이후에 주택의 매매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전세가격이 선행하여 상승한 이후 매매가격이 후행하여 상승한 반면 '05년에는 매매가격이 선행하여 상승한 이후 전세가격이 후행하여 상승하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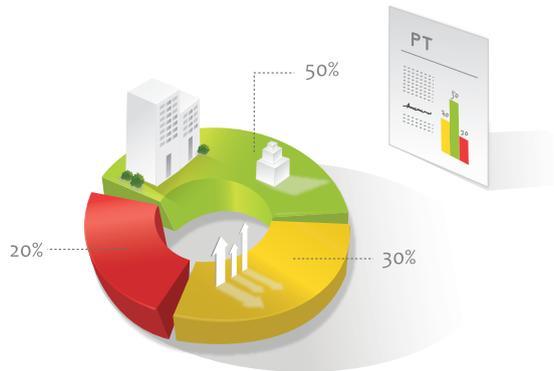
올해는 어떠했는가? '11년 상반기 동안 수도권외의 경우 매매가격은 하락 또는 정체되었지만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일반재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과거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힘이 더 컸다면 앞으로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국제경기는 실시간 동조(공존)되고 있으며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구매력 있는 대기수요의 심리적 위축, 투자재로서 주택인식의 변화 등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수요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동산환경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매입하기란 결코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결국 시세대비 저렴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선택과 주거유형의 집중, 투자자의 발품과 중개업자의 절대적 도움 등 이전보다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만큼 투자의 위험이 투자기회보다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를 포함한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요 부동산법안 통과 여부가 그것이다. 이는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이고 국지적 요인이 된다.

Ⅱ.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정부의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공공기관 이전 계획

■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05.06) 하고 혁신도시 특별법을 제정('07.01)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10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전략 산업이 육성될 계획이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 현황

시도(이전기관 수)	이전대상 기관	인구	면적 (㎡)
부산(13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0.7만명	93.6만
대구(11개)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2.3만명	421.6만
광주·전남(15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5.0만명	732.7만
울산(10개)	근로복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2.1만명	298.4만
강원(12개)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3.1만명	361.2만
충북(11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등	4.2만명	692.5만
전북(12개)	대한지적공사, 국립농업과학원 등	3.0만명	990.9만
경북(13개)	한국도로공사, 우정사업조사사무소 등	2.6만명	381.5만
경남(11개)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8만명	407.8만
제주(9개)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0.5만명	115.1만

주: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등 직제개편 후 확정된 기관 현황, 세종시 이전(16)개별 이전(16) 제외, 인구 및 면적은 '11년 6월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혁신도시 특징 및 진행사항

■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 사이의 네트워크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을 창출할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도시별로 선택된 소수의 전략산업에 집중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및 공공업무지구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영화진흥, 에너지, 농업생명, 정보통신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집중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와 차별화된다.

혁신도시 내 지역전략산업 현황

시도	지역전략산업	시도	지역전략산업
부산	해양산업, 금융산업, 영화진흥	충북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대구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전북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광주·전남	전력산업	경북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울산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경남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
강원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제주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자료: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 우선 '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한 후, 민간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30년까지 계획인구 2~5만명의 혁신도시 10개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조성 단계

단계	혁신도시 종사자 수 및 유발인구
1단계('07년~'12년) 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	공공기간 이전완료 종사자 수 : 2,500~4,000명, 유발인구 : 15,000~25,000명
2단계('13년~'20년) 산·학·연 정착단계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유치 및 정착 종사자 수 : 4,000~8,000명, 유발인구 : 25,000~50,000명
3단계('21년~'30년) 혁신확산 단계	혁신도시 내 전략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추가적 기업·대학·연구소의 유치를 통한 자생력이 있는 혁신 클러스터의 확산 일자리 수와 유발인구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상이

자료: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여는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06년 4월)



■ 현재 부지공사 진행률은 65.2%(’11년 6월 기준)로 부지조성, 이전기관 용지분양, 상하수도 건설 등의 기반공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 원안이 확정되고 대통령이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조속한 추진의지를 표명한 후 공사 진척이 가속화되었다.(’10년 5월 공사 추진율 25.2%에서 큰 폭으로 상승)

* 지역별 부지공사 진행률(’11년 6월 기준) : 부산(99.4%), 대구(56.5%), 광주·전남(73.4%), 울산(67.9%), 강원(57.1%), 충북(39.5%), 전북(53.8%), 경북(80.4%), 경남(74.8%), 제주(82.5%)

혁신도시를 통한 기대효과 및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의 필요성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자립도의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유발 효과는 약 9.3조원, 부가가치 효과는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약 13만 3천개의 일자리 창출 및 지방대학 졸업자의 채용기회 증가가 예상 된다. 또한 공공기관·산업체의 이전 및 인구유입으로 세수도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이다.

해외사례 핀란드의 오울루(Oulu) 테크노파크

- (전략산업) 무선이동통신(3세대 및 4세대 휴대폰 단말기의 R&D 및 생산)
- (입주업체 및 기관)
기업 : HP, Sun, 노키아 등 250여개, 연구기관 : VTT(기술연구센터), 폴리테크닉 등
대학 : 오울루대학
- (창출효과) 세계적인 IT관련 복합 클러스터 이미지 구축, 핀란드 GDP의 4%, R&D 투자액의 30%, 국가 수출액의 20% 점유
- (성공요인) 정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지원정책,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지닌 공대와 연구소를 보유, 노키아 등 확실한 선도 기업이 경쟁업체의 진출을 유도,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개발·상생의 협력 문화), 클러스터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친화적 서비스 정신

자료 : IT 클러스터, 사례 : 시스타·울루 vs 大德, 김득갑, 2002

혁신도시 조성은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사업진행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에 시달려 왔다. 최근 현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사업진행이 잠시 활성화 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도시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정부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한층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녹색 동반성장의 새로운 길

요즘 TV 광고 보셨습니까?

- 어느 순간부터 기업 광고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감성적 녹색테마가 활용되고 있다.
- H사는 최근 젓소보다도 온실가스(이하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광고조차 탄소배출 없이 만드는 친환경 기업임을 강조하였고,
- K사는 숲과 어우러진 새소리와 물방울 소리, 그리고 ‘친환경 차가 더 많아졌으면’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등장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광고에 내세웠다.



탄소경영에 대한 대기업의 관심이 고조

- 대기업은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탄소경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 저탄소 녹색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협력사로부터 녹색부품을 공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일부 대기업들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관리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경영’을 협력사에까지 확대하고, 미이행 시에는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 * (Dell) 협력사에 탄소배출정보를 요구하며, 요건 불충분 시 거래 안함
 - * (Siemens) 탄소배출정보 관리능력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건에 포함
 - * (IBM, Baxter, BASF, Sony, Acer) 공급업체 선정 시 탄소저감 성과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선정기준에 녹색경영 포함

* (Walmart, HP, Dell, Lenovo, Intel, Microsoft, Fujitsu) 납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 공정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관한 정보를 제출토록 공급사에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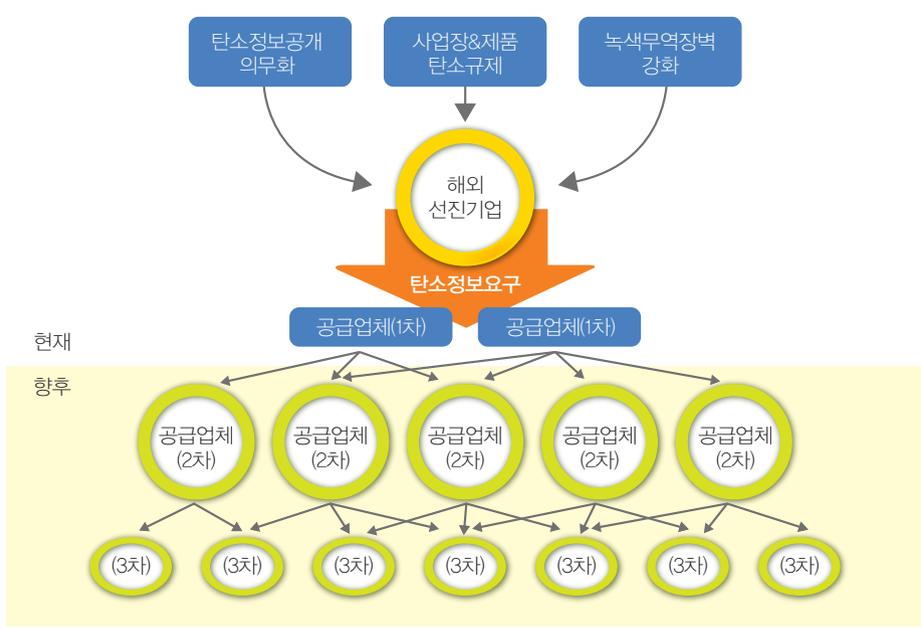
사례 대기업의 탄소경영 요구 사례

Dell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A사는 최근 계약연장에 진땀을 빼야 했다. Dell사에서 탄소배출정보를 요구하며 '탄소경영'을 하지 않는 협력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탄소경영'에 대해 생소했던 A사는 급히 컨설팅사에 수 천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탄소경영체제를 구축했다. 다행히 계약연장은 되었지만 탄소경영을 해오지 않아 온실가스 관리실적에서 평가점수가 좋지 못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자칫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 대기업의 '탄소경영' 요구는 1차 협력사를 시작으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08년 이후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탄소경영'이 급속히 확산



자료 : 해외 바이어의 탄소정보 요구추세 및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10.11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 대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해외 바이어 역시 기업의 ‘탄소경영’ 여부를 투자이사 결정에 고려하는 등 ‘탄소경영체제’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반성장을 통한 위험관리를 고민할 때

- '11년 핵심이슈로 부각된 동반성장은 협력사에게 위험회피와 이윤추구의 기회라 할 수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사회책임경영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의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책임경영 국제표준(ISO26000)을 시행('10.7)하고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국정지표로 발표(광복절 경축사, '11.8.15)하는 등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를 계기로 협력사는 대기업과 동반성장 기회를 활용(예 : LG전자와 협력사간 에코마그네슘 파트너십, '10.12)하여 탄소규제 위험을 기회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린SCM컨설팅,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 IBK기업은행만의 차별화된 녹색 동반성장 솔루션인 그린SCM컨설팅은 대기업 협력사에게 ‘거래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탄소경영체제까지 구축할 수 있게끔 한다.
-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협력사는 합리적 납품단가 책정과 거래안정성을 가장 희망하며 (IBK 경제연구소, '10),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구매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 IBK기업은행은 협력사에게 탄소경영체제를 구축해주고, 탄소경영을 이행하는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그린SCM컨설팅’이라 명명하였다.

* 그린SCM(Supply Chain Management) 컨설팅 :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진단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목표 수립을 통해 탄소경영체제를 확립



〈그린SCM컨설팅 구조〉



- IBK기업은행은 LG전자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11.6.22)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타 대기업과도 협력사 혜택제공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한 '그린생태계' 조성을 기대한다.





IV. 상가 공동명의 취득! 약인가? 독인가?

수익성 부동산투자를 위해 여러 상가를 답사한 김성주(가명)씨는 좋은 매물을 발견하고 성공부동산에서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흥정했다. 흥정이 끝나고,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를 고려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김성주씨가 단독명이나 공동명이나를 선택할 때는 '매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입금으로 지급하는지 여부(종합소득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부담세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1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5,510만원이나, 2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약 3,933만원으로 동일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담액이 1,577만원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초과	35%	14,900,000원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 취득 시 조세회피목적 등이 아닌 한 부담액이 줄어들지만,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행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과세사례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도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제도46011-10430, 2001.4.9, 소득세과-1938, 2009.12.10, 조심2011중333, 2011.5.24)’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차입금이자 비용이 크다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단독명의 또는 법인명의로 취득하거나, 지분별로 구분 등기 가능한 상가의 취득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소재 상가를 신설법인 명의로 취득 시에는 취득세가 종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세

■ 자금출처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상가를 취득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점, 자녀의 경우에도 일단 증여세는 내지만 10년 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재산가치 상승액이 존재할 경우 또는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추가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 공동명의자가 기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상가를 공동명의로 취득 시 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부분에서는 피부양자였다면 그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국민연금 부분에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 단순히 미래에 발생될 양도소득에 대한 절세효과만을 바라고 상가 등을 공동취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차입금이자 비중이 클 경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이자비용 불인정으로 세 부담이 만만치 않고,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명의자의 자금출처가 부족한 경우 증여세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1년 공동명의의 취득 시장·단점 (요약)

구분	장점	단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분산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분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분산	차입금이자 불인정
증여세		자금출처 부족시 증여세 부담
건강보험료		공동명의자의 소득·재산점수 증가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증가 지역가입자 가입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란 선천적인 체질에 의해 여러 외부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소인을 말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와 소아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피부염으로 가려움증이 심한 습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토피 질환에는 아토피 피부염 외에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이 포함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서양에서는 소아의 10% 이상이 아토피 피부염을 경험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발생빈도가 이보다는 낮으나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살펴보면, 환자의 가족 중 70~80%가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영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염증세포들의 면역학적 기능 이상과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과민반응이 아토피 피부염과 관계가 있는데, 생후 1년 이내에 시작되는 유아기의 아토피 피부염에는 계란, 우유, 콩, 생선 등의 음식물이 악화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는 감소하고 흡입성 물질인 양모, 고양이털, 개털, 꽃가루 등에 대한 알레르기가 더 중요한 악화인자가 됩니다. 그 외에 비정상적인 혈관반응, 약물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의 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 피부건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 혹은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증상은 가려움증과 분포를 보이는 피부병변이 만성적이거나 재발한다는 것인데, 연령에 따라 유아기, 소아기, 사춘기 및 성인기로 구분됩니다.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은 흔히 태열이라고 불리며 생후 2~3개월 이후에 시작되고 주로 양 볼과 머리, 몸통, 팔, 다리의 바깥쪽에 나타나며, 붉은 반점이 생겨 진물이 나고, 딱지가 지거나 수포 혹은 농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부병변이 유발 혹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소아기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팔다리가 접하는 부위와 엉덩이, 눈 주위, 귀 주위, 손목, 발목 등에 발생하며 피부가 건조해지고 두꺼워지며, 각질이 일어나고, 긁어서 딱지가 생기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계속 긁어서 상처가 나고 색소가 침착되며 피부가 가죽처럼 변하는 태선화가 일어납니다. 음식물에 대한 과민반응은 감소하고 흡입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이 더 문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사춘기 및 성인기의 아토피 피부염은 소아기 때와 비슷하게 팔과 다리의 접하는 부위, 손목, 눈 주위, 얼굴 및 목 주위에 발생합니다.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심하며, 태선화가 흔하게 나타나고, 유두 주위나 손의 습진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정신적으로 민감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병변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및 예방

아쉽게도 동서양 의학을 막론하고 현재로서는 완치법이나 타고난 유전적 성향을 바꿀 수 있는 체질 개선제는 없습니다. 체질 개선을 시켜준다거나 뿌리를 뽑아낸다는 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환자와 보호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정보와 부적절한 민간요법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오히려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반대로 어차피 완치도 되지 않고, 나이가 들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피부에 많은 손상을 주어 피부가 가죽처럼 변하게 되고, 피부 감염의 기회를 높여 합병증을 초래하며, 가려움증과 피부병변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학업, 대인관계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환자의 나이, 피부염의 부위와 정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가려움증을 줄이는 등 피부염이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평소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극성 물질을 피합니다.

- ① 털옷이나 모직류, 나일론 옷은 입지 않아야 합니다.
- ② 비누를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극성이 강한 비누는 피합니다.
- ③ 새 옷은 한번 세탁한 후 입고, 세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헹굽니다.
- ④ 쾌적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너무 덥거나 추운데 노출되는 것을 피합니다.
- ⑤ 땀을 흘리면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 ⑥ 커피, 차, 콜라, 초콜릿 등의 카페인 음료와 술 등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킵니다.

알레르기 유발항원을 피합니다.

- ① 음식물 알레르기 : 우유, 달걀, 콩, 밀, 메밀, 생선 등
 나이가 어릴수록 음식물과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유아기에 지나친 식품제한은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증상과 뚜렷한 관련이 있는 음식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원인음식물을 찾아볼 수 있으나 혈액검사 결과가 증상악화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유아기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음식일기를 쓰면서 피부염이 음식에 따라 악화 혹은 호전되는 양상을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가장 의심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2주간 철저히 제한하여 증상이 좋아지는 것과 다시 섭취하였을 때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밀의 대용식으로는 귀리, 쌀, 보리, 옥수수, 콩가루, 호밀 등이 있으며 우유를 끊을 경우 두유, 염소젖이 적절한 영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습진을 위한 기본식단은 쌀, 호밀, 두유, 사과와 배, 같은 바나나, 불에 구운 쇠고기 등으로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② 흡입 알레르기 :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동물 털 등
 나이가 들면서 대기 중에 있는 흡입성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증가합니다. 애완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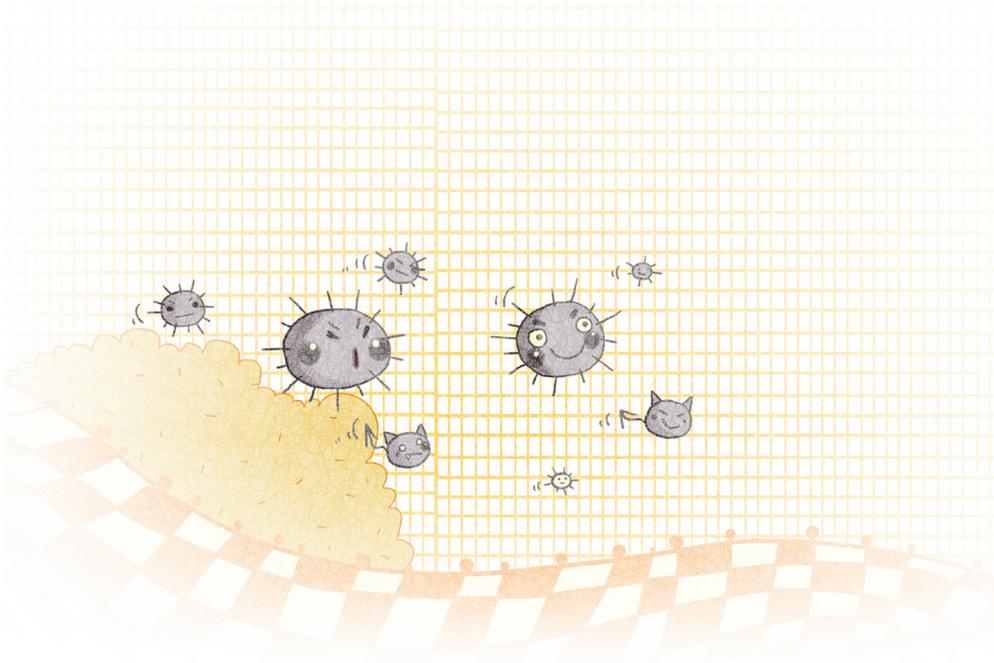


키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집먼지진드기가 침대매트리스, 카펫, 커튼, 헝겊소파, 베개 등에 많으므로 이를 제거하거나 철저히 청소하여야 합니다.

③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피부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단순포진, 사마귀 등의 바이러스 감염과 황색포도구균 등의 세균감염, 곰팡이균 감염이 잘 생깁니다.

④ 정서적 안정이 필요

정서적 긴장이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소양증과 피부병변으로 환자들은 대개 정서적으로 예민해지기 쉽고 때로는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자자신의 긍정적인 사고와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 소버린 쇼크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조사결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촉발된 세계경기의 위기

최근 경기 재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버린 쇼크(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11.8.5)는 글로벌 경기에 대형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 미국과 유럽의 부채문제가 리먼사태와 같은 금융쇼크로 확대되지 않더라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변동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 특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외부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소버린 쇼크(Sovereign Shock): 정부나 공적기관의 채무상환위기를 뜻하며, 7월말 미국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속에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결국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발화되었다.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 등과 함께 맞물려 세계경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IBK경제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이를 정책당국에 전달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건의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IBK기업은행의 국가공식통계조사인 「중소제조업 동향조사」 대상 업체 중 IBK기업은행 거래기업 689개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 설문조사는 「IBK기업은행 고객센터」에서 대상업체 CEO에게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689개 업체 중 294개의 설문을 회수하여 42.7%의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기간은 '11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다.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자금사정은 당장보다 향후 점증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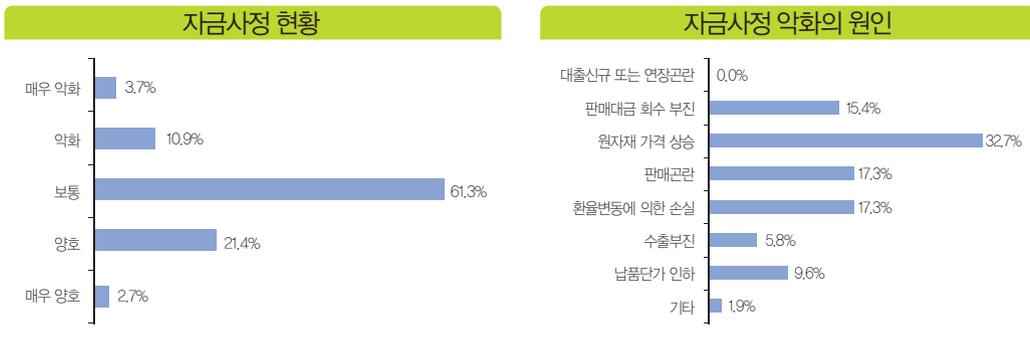
(자금사정 현황) '최근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14.6%가 이미 악화된 것으로 응답했다.

- 소버린 쇼크 이후 10여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은 '매우 악화'된 업체가 3.7%, '악화'된 업체는 10.9%로 조사되었다.

- 반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1.3%로 매우 높게 조사되어 금번 쇼크가 아직까지 중소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사정 악화의 원인) '자금사정 악화의 주된 사유'를 묻는 설문에는 원자재 가격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32.7%가 응답했다.

- 원자재 가격 상승 다음으로는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과 판매곤란이 각각 17.3%,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도 9.6%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 반면, 대출신규 또는 연장곤란 항목에서는 0%로 나타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 IBK경제연구소

리먼사태('08.9.15) 이후 중소기업 자금경색 과정

- '08년 9월 '리먼사태'와 '11년 8월 '소버린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에 미친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위기 이후 점증적으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졌음을 기존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
- 주요 통계자료
 - (부도업체) 리먼사태가 발생한 '08년 9월은 8월대비 부도업체 수가 14.0% 증가 하였으며, 10월에는 58.1%로 급증(한국은행)
 - ※ 부도업체 수(개) : 178('08.8) → 203('08.9) → 321('08.10)

- (자금곤란업체) 자금곤란업체 비중도 '08년 9월은 전월대비 1.2%p 증가한 반면, 10월에는 2.4%p, 11월에는 4.3%p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IBK경제연구소)
 - ※ 자금곤란업체 비중(%) : 42.5('08.8) → 43.7('08.9) → 46.1('08.10) → 50.4('08.11)
- (대출수요)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역시 '08년 3분기보다 4분기에 최고점을 기록(한국은행)
 - ※ 대출수요(%) : 22('08.2/4) → 22('08.3/4) → 44('08.4/4) → 31('09.1/4)
- 소버린 쇼크 발생 당월시점에서 조사한 현재의 중소기업 자금곤란업체(14.6%)보다 이후 지속적인 중소기업 자금사정 점검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

(위기의 지속시기) '최근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는(79.3%의 업체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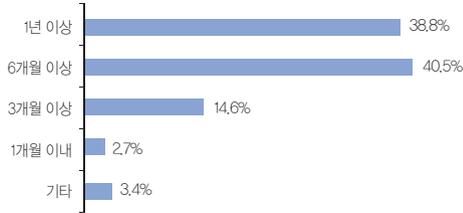
- '1년 이상 지속'이 38.8%, '6개월 이상 지속'이 40.5%로 이는 당장의 소버린 쇼크보다 이후 전개될 경제상황을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 '1개월 이내'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는 2.7%에 불과했다.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 '중소기업의 악화된 자금사정과 이후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을 묻는 설문에는 금리인하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57.3%가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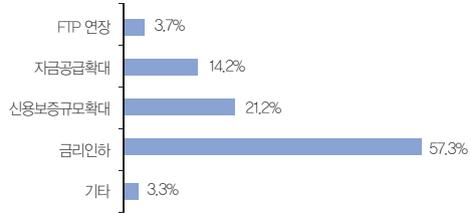
- 금리인하 다음으로는 신용보증 규모확대가 21.2%, 자금공급확대가 14.2%, Fast Track Program 연장이 4.0%로 조사되었다.
- 이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으로 진행된 금리인상, 보증규모 축소 등의 조치가 새로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 정부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리인하, 보증규모 확대, Fast Track Program 신설 등 전방위적 대응을 실시, 현재는 지속적인 금리인상, 보증규모 축소 등 출구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Fast Track Program은 3차례 연장되어 '11년 12월 종료예정이다.
- 기타 의견으로는 환율안정과 대기업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기의 지속 시기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



자료 : IBK경제연구소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

소버린 쇼크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사태가 현재로서는 매우 크지 않으나, 이로 인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리먼사태('08.9.15) 발생 이후 세계경기 불안요인의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긴급자금 수요는 '09년 1분기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 ※ Fast Track Program지원실적(조원) : 2.8('08.4/4) → 7.9('09.1/4) → 4('09.3/4)
- 금번 소버린 쇼크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 국내외 경기흐름 과정에서 악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향후 세계경기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최근 지속적으로 인상된 정책금리는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둘째, 위기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 확대되었다가 출구전략 일환으로 회수되고 있는 보증회수 시기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필요시 확대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셋째, 금년 12월로 종료예정인 긴급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Fast Track Program의 추가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한 긴급유동성 자금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기업생태계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문화가 금번 위기를 단초로 좌초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내용문의 : 중소기업팀 서경란 연구위원(02-6322-5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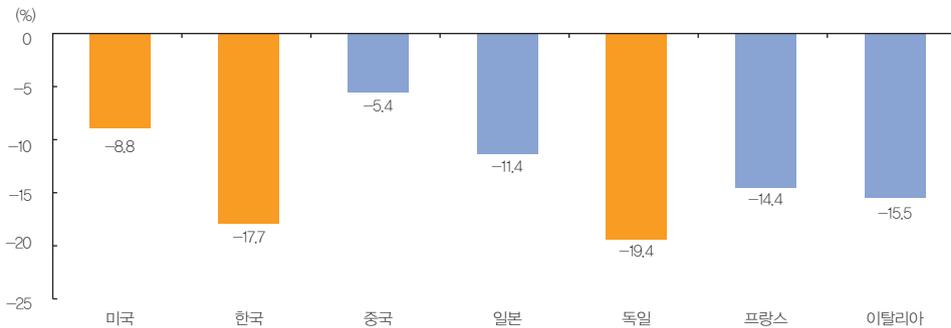
II.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이슈 및 시사점

마땅한 대안이 없는 ‘부채의 덫에 걸려든 선진국들’

최근의 혼란스러운 글로벌 금융시장의 발생원인, 향후 전망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① 유럽 부채위기 확산, ② 세계경기 재침체(Double dip) 우려, ③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의 이유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 미국은 부채한도 증액 합의 이후 경제지표 악화로 더블딥 우려가 대두되면서 8월 4일 주식시장이 급락장(검은 목요일, 다우지수, △4.3%)을 맞게 되었다.
 - 다음날,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다우지수가 또 다시 5.5% 폭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 물론 국내 주식시장(KOSPI)도 예외는 아니어서 8.2일 이후, 약 3주 동안 무려 18%(376p)나 하락하였고,
 - 원/달러 환율도 23원(원/엔 43원)이나 상승하는 등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변동성을 기록하였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



주 : 전주('11.8.2)대비 현재('11.8.19) 증감율, 자료 : Datastream

현재의 시장불안은 ‘부채의 덫에 걸려든 선진국들’이 그 원인이다.

-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하여 정부부채 규모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더욱이 경기회복마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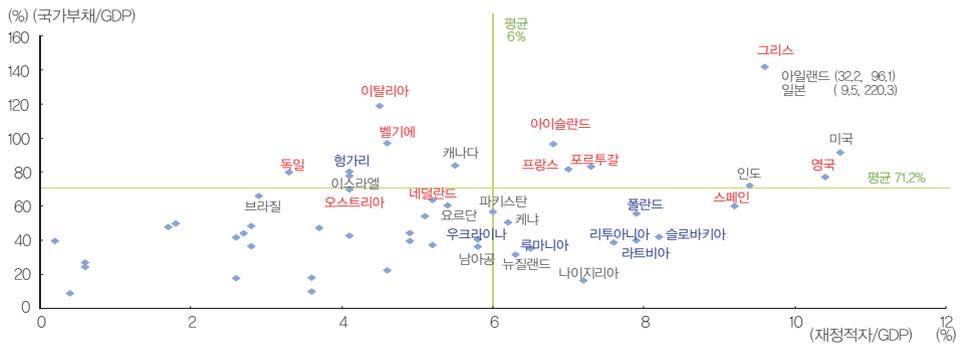
- 지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정책수단을 모두 소진하여 선택할 수 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 [주요 선진국의 과다한 정부부채비율] 주요 선진국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금융위기 이후의 막대한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정부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한 것이 원인이다.

- IMF에 따르면 '10년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일본(220%), 그리스(142%), 이탈리아(119%) 등이 100%를 넘고, 미국(92%), 프랑스(84%), 독일(80%), 영국(77%) 등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한편, 아일랜드(32%), 미국(11%), 그리스(10%), 프랑스(7%) 등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주요국 GDP 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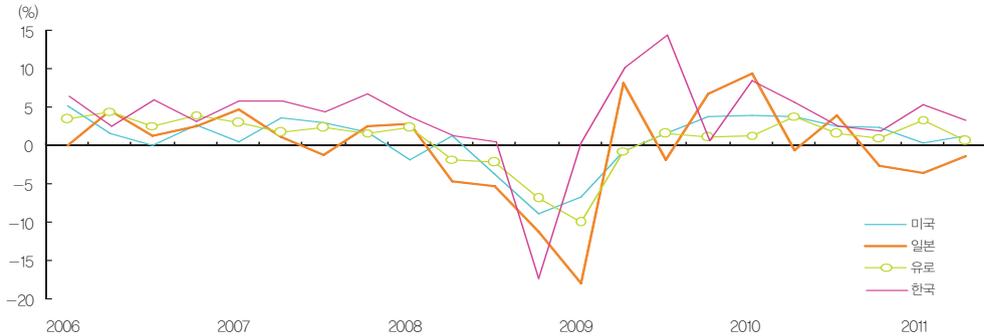
주 : 아일랜드와 일본의 괄호 안 수치는 GDP 대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순서임. 자료 : IMF

○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경기 재침체 우려] 경제가 또 다시 침체로 빠져드는 Double Dip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미국의 경우,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의 회복이 미미한 상황에서 '11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1/4분기 : 잠정치인 1.9%보다 크게 낮은 0.4%로 수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 따라서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부양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정부부채가 과도한 상태라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뚜렷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

주요국 경제성장을 추이



주 : 전기대비, 자료 : Datastream

-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은 정치적 리더쉽의 문제]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리더쉽 부재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재정적자 감축규모 미흡 등으로 신용등급을 강등(AAA → AA+)함에 따라
 -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신뢰가 큰 손상을 입었고 국제적으로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 [향후전망] 현재의 시장상황은 그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아 미리 전망하기는 어려우나 세계경제의 Double dip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그러나, 정책대안의 부재로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①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②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장기화되며, ③ 이로 인하여, 국내 수출 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단기적]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최근의 시장 변동성은 '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하나, 미국과 유럽 선진국가들로 발생된 문제이고 한국과 같은 신흥국으로의 영향은 간접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 당분간 시장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외화유동성 관리 및 금리와 환율 등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 [장기적] 세계경기의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 최근 금융시장에서의 충격과 변동성 확대는 부채과다로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부족한 주요 선진국들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 및 정부지출 축소와 같은 상당기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미국,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긴축으로 인해 세계경기의 회복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중소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지역을 신흥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 선진국들의 부진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수출 경쟁력 등 양호한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 왔으며,
 - 최근에도 7월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충격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 해외경제

경기 재침체(Double Dip) 우려가 지속되는 미국과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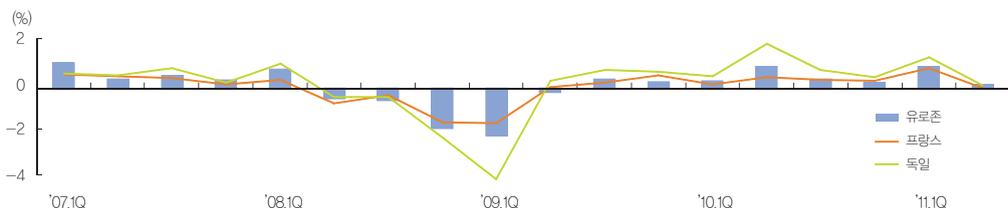
미국, 생산 및 소매판매 호조로 더블딥 우려 다소 완화

- 7월 산업생산은 자동차 업종의 호조로 전월대비 0.9% 증가
 - 올해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자동차 부문 생산은 전월대비 5.9% 상승하여 큰 폭의 반등 실현
- 또한 신규고용자 수가 다소 확대되고,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0.5% 증가
- 그러나 ①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8월 경제지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② 재생적 경제회복의 기준인 투자 및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향후 미국의 경기침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

유럽, 주요국 경제성장률 부진과 자금 확충 합의 실패로 위기감 지속

- '11년 2/4분기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전기대비 0.0%와 0.1%로 부진하여 경기둔화 우려
- 또한 8월 16일, 독·프 정상 회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로는 유럽의 재정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
 - 금융거래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유로 공동경제위원회를 신설해 유럽 국가들의 재정 통제 여부를 감시하는 사안에 합의
 -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및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합의는 실패
- 유로존 재정통합의 기초인 유로본드를 발행하기에는 아직 위기의식이 부족하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태로 판단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향후 주요국으로 위기 확산 시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존재

유럽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주 : 전기대비, 자료 : Datastream

II. 국내경제

2분기 가계소득은 개선되었으나, 높은 물가상승률 등 불안요인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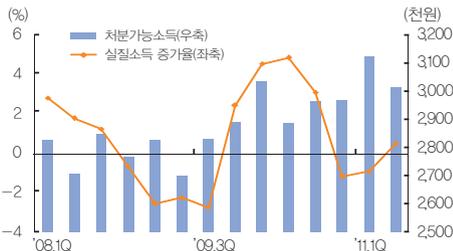
2분기 가계 실질소득 3분기 만에 소폭 증가를 기록

-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명목 가계소득은 월평균 371만 3천원으로 4.7% 증가했으나 소비자물가가 4.2% 올라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에 그침
 - 명목 가계지출은 300만 5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으며, 이 중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4.3% 증가(실질 기준 0.9% 증가)
 - 농축산물가격 및 유가상승 등으로 식료품 지출 및 교통 지출이 각각 8.9%, 10.8% 증가했으나, 보건과 교육 지출은 각각 6.2%, 2.7% 감소
 - 비소비지출은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
-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01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
 - 가계 흑자액(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은 70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

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 확대 등 수요측면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산물 및 석유류의 가격 상승 등 공급측면의 압력도 확대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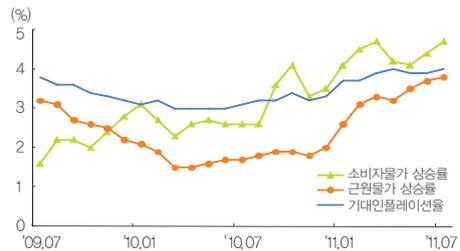
-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했으며, 전월대비 0.7% 상승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8%를 기록하는 등 공업제품 및 서비스 중심의 물가 상승세 지속
 - 장마 및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6.9% 상승하였으며, 정유업계의 가격인하 종료 영향으로 석유류의 물가가 반등(전월대비 1.5% 상승)
 -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4.0%로 전월대비 0.1%p 상승

실질소득 증가율 및 처분가능소득 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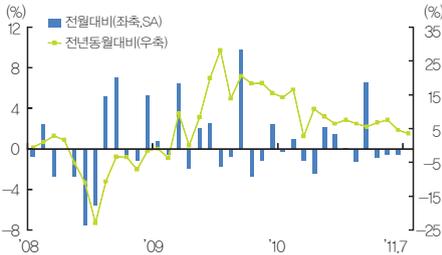
Ⅲ. 중소기업

전월대비 생산이 감소하고, 수익성은 악화 되는 등 회복세가 소폭 악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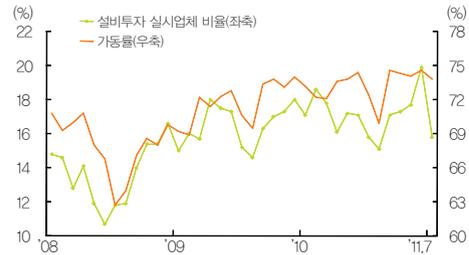
7월 중소기업 생산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비금속광물, 의약품 등의 부진으로 전월대비 0.1%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3.6% 증가
 - 생산지수(2005=100) : 125.5('11.4) → 124.8('11.5) → 124.2('11.6) → 124.0('11.7)
- 가동률도 전월대비 하락
 - 가동률(%) : 74.3('11.4) → 74.1('11.5) → 74.6('11.6) → 73.8('11.7)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 추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및 가동률 추이



자료 : IBK경제연구소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2월 이후 5개월만에 하락

-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자동차, 기타기계 등의 설비투자 실시업체 수 감소로 하락
 -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 : 17.3('11.4) → 17.7('11.5) → 19.9('11.6) → 15.8('11.7)

자금사정 곤란 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수익성은 악화

- 자금사정 곤란 사유 중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응답비율은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 감소' 등은 증가
 - 자금사정 곤란 업체 비율(%) : 29.8('11.4) → 29.5('11.5) → 28.7('11.6) → 28.4('11.7)

- '원자재가격 상승' 응답비율(%) : 31.1('11.4) → 26.6('11.5) → 24.1('11.6) → 19.4('11.7)
- 수익성은 음료, 기타운송장비 등의 수익성이 낮은 업체수의 증가로 전월대비 악화
 - 수익성 높음-낮음 차(%p) : -31.3('11.4) → -31.0('11.5) → -30.6('11.6) → -33.3('11.7)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곤란 업체비율 추이



중소제조업 수익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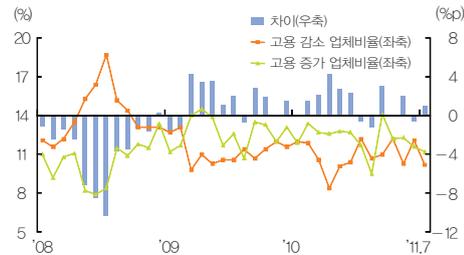


자료 : IBK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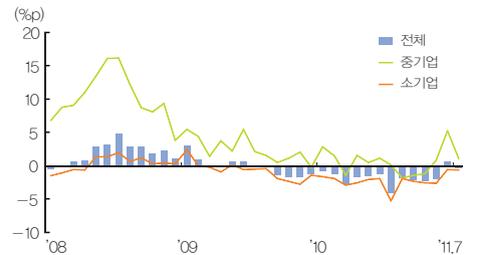
고용사정은 전월대비 개선되었고 재고는 중기업을 중심으로 감소

- 고용 감소 업체 수 감소로 고용 증-감 차는 전월대비 상승
 - 고용 증가-감소 차(%p) : 0('11.4) → 2.0('11.5) → -0.5('11.6) → 1.0('11.7)
- 중기업을 재고 과잉 업체 수가 감소하여 재고 과잉-부족 차는 전월대비 하락
 - 재고 과잉-부족 차(%p) : -2.2('11.4) → -1.9('11.5) → 0.7('11.6) → -0.3('11.7)

중소제조업 고용 추이



중소제조업 재고 과잉-부족 차 추이



자료 : IBK경제연구소

IV. 금융시장

금리는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압력을 받을 전망

대외불안 심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지속되며 시중금리는 낮은 수준을 당분간 이어갈 전망

-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과 유로존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에 대한 우려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며 시중금리는 8월 들어 급락한 상황
 - 8월 초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으나, 채권시장으로는 소폭 유입
 - 8월 금통위는 국내경기는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불안 요인이 확대될 것을 경계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
-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이어지며 낮은 금리수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글로벌 경기침체 및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이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상승압력을 받을 전망

- 미국 더블딥 우려 확산 및 S&P의 美 신용등급 강등이란 초대형 악재에 이어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대두되는 등 8월 한 달 동안 국제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으며 원/달러 환율도 대외요인의 영향에 따라 한때 1,095원대까지 상승
- 유럽 재정위기 우려 완화 및 미국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합의 혹은 도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커질 전망(1,070원대~1,090원대). 다만, 9월 FOMC에서 3차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책 발표에 대해선 주목할 필요
- 달러/엔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원/엔 환율은 원화가치 추가하락 가능성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

금리 추이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경제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1/4분기	2/4분기	4월	5월	6월
성장	GDP(%)	0.3	6.2	4.2		3.4 ('11년 2/4분기)		
물가	소비자물가(%)	2.8	2.9	4.4	4.2	4.2	4.1	4.4(4.7)
	생산자물가(%)	-0.2	3.8	6.7	6.4	6.8	6.2	6.2(6.5)
소비	소비재판매(%)	2.7	6.6	5.1	5.6	5.1	6.3	5.6
산업활동	광공업생산(%)	-0.1	16.2	10.6	7.1	6.9	8.1	6.4
	제조업가동률(%)	74.4	81.2	83.1	81.4	80.4	81.4	82.5
투자	설비투자추계(%)	-9.4	25.1	6.6	4.6	-0.6	10.1	4.3
	건설기성액(%)	1.6	-3.3	-12.6	-6.6	-10.1	-9.2	-1.5
고용	실업률(%)	3.6	3.7	4.2	3.4	3.6	3.3	3.3(3.3)
국제수지	경상수지(억달러)	327.9	282.1	26.1	64.5	12.8	21.8	29.9
	수출증가율(%)	-13.9	28.3	29.6	19.6	23.6	22	13.6(27.3)
	수입증가율(%)	-25.8	31.6	26	27.3	24.3	30.1	27.5(24.8)
중 소 제조업	산업생산(%)	-1.5	14.2	6.5	6.4	6.9	7.6	4.7(3.6)
	평균가동률(%)	68.9	72.8	72.3	74.3	74.3	74.1	74.6(73.8)
	설비투자실시업체(%)	15.4	16.9	16	18.3	17.3	17.7	19.9(15.8)
	자금사정곤란업체(%)	36.2	29	30.6	29.3	29.8	29.5	28.7(28.4)
	BSI 실적(기준=100)	83	95	81	96	'11년 2/4분기(96)		
금리	콜금리(%)	1.98	2.16	27.8	3.08	3.01	3.02	3.21(3.26)
	국고채3년(%)	4.04	3.72	3.8	36.8	3.74	3.66	3.65(3.77)
환율	원/달러(₩)	1,276	1,156	1,120	1,084	1,087	1,084	1,081(1,060)
	원/100엔(₩)	1,363	1,321	1,361	1,327	1,305	1,334	1,343(1,333)
유가	WTI(\$/bbl)	62.1	79.6	94.6	102.3	110	101.4	96.3(97.3)
원자재	금(\$/온스)	975	1,228	1,388	1,508	1,483	1,511	1,529(1,578)
	전기동(\$/톤)	5,185	7,555	9,640	9,155	9,508	8,946	9,507(9,460)
	알루미늄(\$/톤)	1,702	2,199	2,527	2,618	2,686	2,596	2,584(2,543)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금리·환율·유가·원자재는 기간 중 평균, ()는 '11년 7월 수치

